

자유시장원리와 교육시장의 공(公)개념



이 경 준
선문대 총장

WTO체제 출범 이후부터 자유시장원리 또는 시장경쟁원리라는 말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범람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영역이나 예외 없이 자유시장 경쟁원리가 강조되고 있다. 지난 문민정부 때에는 국제화·세계화라는 시대적 유행어와 함께 그 배후에는 항상 자유시장원리라는 말이 따라 다녔다.

특히, IMF체제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운영의 가치관 즉, 국정운영의 정책기조로 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와 WTO체제 속에서 시장개방압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국제질서의 기본이념인 자유시장원리의 수용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통화기금의 처방에 따라 경제회생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유시장경제원리라는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원리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에 대한 설명이나 정책수립의 기초적인 원리로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 사용되어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원리가 곧바로 수요자중심의 논리로 해석되고 개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숭배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교육영역에까지 자유경쟁원리가 교육당국의 지원이나 규제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나치다고 볼 수 있다. 교육당국에서 그간 대학을 지원해오던 국비지원도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전국의 대학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모든 과제를 프로젝트화하여 지원에 있어서 차별화를 시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향인 듯 하다. 그러나 대학마다 고유의 교육목적과 건학이념이 있고 개별화된 특성화 정책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그것

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 교육부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안에서 대학간의 소모전을 부추길 수 있으며, 소모전의 끝은 재정난과 파멸로 치닫게 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세중에 의하여 확보된 국가예산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좋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앞서가는 대학은 더욱 발전하게 되고 대학재정이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대학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대학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의 심화현상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무슨 원죄가 있기에 좋지 못한 교육환경 안에서 공부를 하여야 한단 말인가? 분명 모든 학생은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교육당국에서 국민의 세중에 의해 충당한 국비를 인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공개념을 크게 해친다고 본다.

일반 시장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교육의 현장에서만큼은 시장경제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대학은 사회의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 있어서는 스승으로서의 사도가 바로 서야 하고, 사제지간의 기본적인 윤리가 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피교육자의 전공과 인성이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려면 합리적 대학운영, 대학경영의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원리는 그 본래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떠나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는 정글의 법칙 즉,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자의 자유'에 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원리의 성공'은 교육당국이 경쟁의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로 돌아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의 이유로 어렵다고 본다. 첫째, 정경유착이 심한 우리 나라의 정치문화 때문이며 둘째, 정경유착의 고리를 설명 꿰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혜택을 입은 대학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 셋째, 경쟁력이 있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는 사실상 상위 소수의 대학들만을 보호하겠다는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육계의 혼돈현상이 이와 같은 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때, 하루속히 교육계가 시장경제원리라고 하는 이상으로부터 벗어나 교육시장의 공개념이 교육현장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한**